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1판 1쇄 인쇄 2016. 4

1판 1쇄 발행 2016. 4

발행처 더불어민주당
발행일 2016년 3월 28일
발행인 김종인
편집인 이용섭, 이목희, 민병두
기획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만든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제작 HOWSconsulting

문의 070-7847-3670

저작권 ©더불어민주당 2016

펴낸곳 알리북스

출판등록 제2016-000008호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416호(목동, 현대41타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정부가 망친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새누리당 집권 8년, 우리 국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낡은 시대의 성장논리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국가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일자리는 만들지 못했으며, 청년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은 국민에게 좌절과 분노,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득불평등 아시아 1위,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가 필요합니다. 불평등과 경제침체만 낳는 박근혜정부의 낡은 경제로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장 없는 경제는 추락입니다.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경제침체만 낳는 박근혜정부의 낡은 경제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짓눌렀던 좌절과 분노를 넘어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경제로 나갈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민생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정당입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불평등과 경기침체만 심화시킨 정부의 낡은 정책을 극복하고, 불평등해소와 경제성

장을 동시에 이루면서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더불어 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방치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께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 드려서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흠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책공약집은 반드시 실천으로 지켜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이 이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 이용섭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역사는 왜곡됐으며 안보는 불안합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으며 가게 빛은 이미 1200조를 넘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복지공약 파기, 안보무능,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등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3일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파탄지경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흠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3대 비전으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제시합니다.

더불어성장은 분배나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질적 성장전략입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불어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꽃피워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한 사회를 위해 권력집중과 부패 그리고 대북정책의 실패로 빚어진 각종 재난·사건·사고 그리고 외부위협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대 비전을 위한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 공약집에는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3대 비전, 7대 약속 그리고 150개 실천과제를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내걸었던 많은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할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유권자의 4.13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 이용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의원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서민경제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불안, 보육·교육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안전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새누리당정권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함에 따라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위기 단계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입니다.

이런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과 같은 7대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비전과 약속을 실현시킬 구체적 실천 과제 150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50개 실천과제 중 가장 먼저인 제 1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집에 담긴 내용들은 우리당이 효과와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방안 등을 검토한 우리당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이 온 힘을 다해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은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재벌들은 끊임 없이 사내 유보금을 늘리면서 각종 세제혜택 또한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사상 최고치(12.5%)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갈수록 확대되는 임금격차 등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누구 한명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만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으며, 복지공약은 파기를 넘어 복지축소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중 5개만 이행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맞춤형 개별급여 등 복지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살리고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 부자와 재벌들의 대한

민국이 아닌 중산층·서민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등에 의한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여가기 위하여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의 복지규모를 적정화 하겠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통하여 더불어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는 기회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청년구직활동 보장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에게는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30·40대 여성에게는 보육 등 사회적 지원 제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3월

민주정책연구원장 민병두

7대 약속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16
2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37
3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45
4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64

5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82
6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90
7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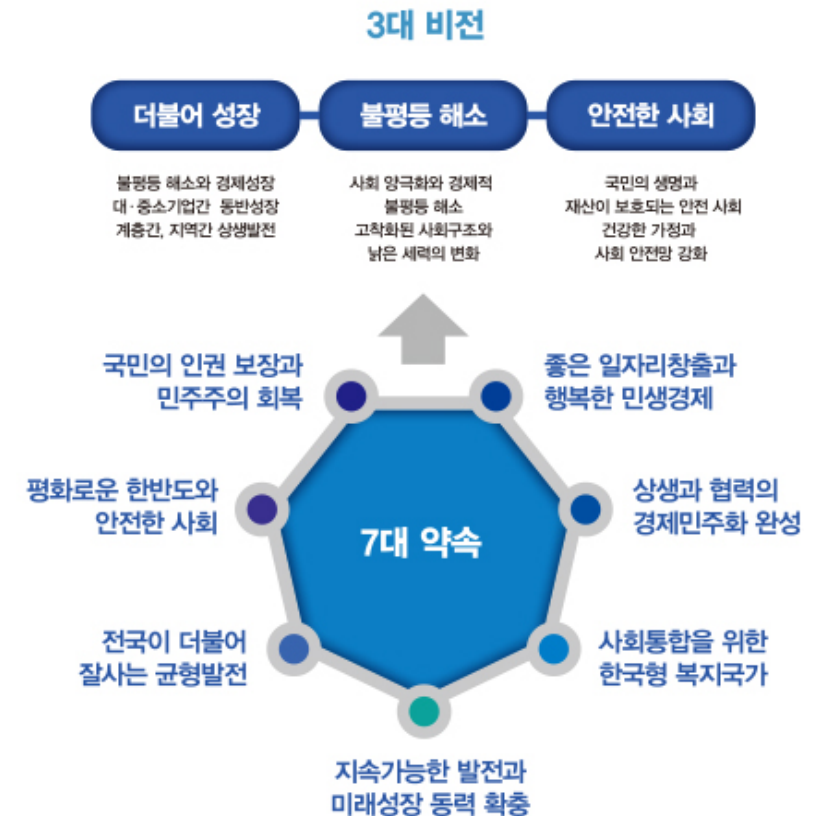
정책 이슈 스토리	청년과 더불어	_116
	직장인과 더불어	_120
	자영업자와 더불어	_124
	어르신과 더불어	_128
	여성과 더불어	_132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_136
	농어민과 더불어	_140

재원소요 규모 및 조달 방안	_145
-----------------	------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 이명박·박근혜정권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서민경제는 황폐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였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불안, 보육·교육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안전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는 새누리당 정권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낙수경제론을 고집함에 따라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의 덫 그리고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위기 단계이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입니다.
- 이런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단방약과 미봉책에 의존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병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1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좋은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민생경제



1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경찰·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 (OECD 평균 21.3%의 절반수준)
 - 경찰·소방·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 등 공무원 증원 17.1만명(매년 4.3만명)
 - 사회서비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증원 13.5만명(매년 3.4만명)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산업 확대로 총 4.2만명(매년 1.1만명)
 -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꾸어 정부 및 공공기관·민간수탁기관 정규직 전환 9만명
-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3%→5% 상향,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하여 25만 2천명의 일자리 창출
- 법정 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모태펀드의 청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 : (2016년) 1,000억원
 -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 신설
- 한국형 팹랩(Fab-Lab) 조성, 공공특허 무상제공, 대학창업 지원 강화 등
 -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팹랩에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청년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공공특허를 무상 제공하거나 연계 지원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 앱, SW융합, 콘텐츠 분야 등의 전문인력 양성 및 예비 창업팀 발굴·지원을 통한 스마트 1인 창조기업 육성

3

청년안전망 도입하여,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 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취업활동지원(6개월간 60만원) 지급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방식으로 최초의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4

불평등 해소 목표 제안 '777'플랜을 도입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의 원인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격차,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
 - 낙수효과(trickle-down)에 근간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오히려 감소
 - 대기업의 증가한 기업소득은 사내유보금 형태로 기업내에 잔류하고 투자·고용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음
 -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성장' 틀로 구조개혁할 필요성 대두
- 양극화 해소의 목표치로 '777플랜' 제안
 -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림 (2011년 기준 OECD 평균 68.8%)
 -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 (2012년 기준 OECD 평균 71%)
 -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 (1995년 73.5%)로 복원
-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및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 부여하여 가계소득 증가 유도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① 생활임금제 확산 ②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③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지원 ④ 3의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 재벌총수 일가의 「꿈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검토

5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장애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확충
- 국공립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대폭 확충
 - 사회서비스 직종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근무제(1일 2교대제) 실현, 현재 전체 노인의 6%(35만명)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 노인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확대 등
- 지방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단 소속 인력을 국·공립 시설에 배치하여 근무



6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서민의 가계를 돕겠습니다

- 2020년(제20대 국회 내)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원 달성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 지자체 생활임금제 적용 및 관련 민간기업에 확산

7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 의무화 추진. 특히, 생명·안전 업무에 정규직 고용의무화 및 외주화 금지 최우선 입법
-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 확대, 무기 계약직 전환 시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등 차별 해소
-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두루누리지원사업(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건강보험 지원확대
 - (2016년 현행) 월급여 140만원, 10인이하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40~60% 차등지원하는 것에 건강보험 추가지원
- 차별시정 신청 주체 및 비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차별시정 제도 개선 추진
-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8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등으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 의무화

9

‘비정규직 부담금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OECD 평균수준(11.8%)으로 줄이겠습니다

-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사내하청·용역·도급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체)가 비정규직 사용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정부가 이를 비정규직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등 환급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최대 월 100만원(연 1200만원) 지원하고, 사내하청·용역 업체 소속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현행 60만원 한도(간접노무비 포함)에서 지원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

10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법정근로시간 1주의 노동시간 한도 ‘휴일을 포함’한 52시간 법제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최장 근로시간의 한도 설정
- 2020년까지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근로시간’ 적용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
-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근로자에 적용 확대

11

시간제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시간제-전일제 전환청구권 보장하겠습니다

-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간제-전일제 일자리 근로 전환의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로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예방 촉진
- ‘좋은 시간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 확산
 - 단순 사무나 행정지원 업무를 벗어난 새로운 직무모델을 개발하여 공공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확산

12

일 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 지원하고,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기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 취약계층근로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적용대상에 포함
-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청년알바 등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적용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180일~360일로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현행 50% → 60%)으로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



13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여, 일할 권리와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에게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 제도화
 - 대상 특수고용노동자의 약 9.7%만이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제도 도입

14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제를 도입하여, 좋은 일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일자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제도' 도입
 - 국가 및 지자체 발주·용역·위탁사업자의 입찰 및 선정과정에 있어서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기업 우대

15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하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을 지키겠습니다

- 쿨링오프제(강요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도입 및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수 요건화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등 도입

16 국제노동 핵심기준(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 ILO 핵심협약 중 비준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과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비준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 노조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설립신고 반려조항 삭제,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협약의 적용률 확대,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



17

근로자범위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습니다

-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사업주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범위를 확대
 - 위험을 생산하는 사람은 그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관철
- 산재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18

선순환 계층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복지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2022년까지 550만 주거취약가구 전체로 주거지원 확대 추진과 자치단체별 '주거상담 센터' 운영으로, 주거빈곤층→전월세가구→내집마련의 선순환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
- 주거빈곤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응급주거 제공, 맞춤형 주거상담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발
 -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단체별 주거개선 프로그램 적극 지원
 - 대상가구 전체로 주거급여 확대 및 급여요율 현실화
- 렌트푸어 및 전세가구
 - (준)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민간임대 등록제 도입으로 주거선택권 강화
 - 준공공임대 지원강화로 전세물량 공급확대
- 내집마련가구와 하우스푸어
 - ① 1가구1주택기조 유지, ② 토지불로소득 공평과세, 개발이익환수 강화로 부동산거품 제거 및 저렴한 주택공급 촉진, ③ 생애최초내집마련제도 및 신혼부부주거지원제도 대상 확대, ④ 실수요자용 중소형주택 공급확대 등
 - 장기고정금리대출 유도 및 원리금동시상환시 이자경감방안 마련
 - 1가구1주택에 대한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제한
- 다주택가구
 - 임대사업자 양성화 지원방안 마련



19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어드리고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수준 인하
-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준 자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보 제공 요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의 확대,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20

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임대시장선진화 등으로 전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향후 10년 동안 재고량 250만호, 13% 목표 달성
 - 청년용 쉼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수준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재고량 10만호를 유지하여 대학생, 청년의 주거난을 획기적으로 개선
 - 공공임대 재고량의 1/3수준을 신혼부부에게 할당
 - 에너지플러스 하우스를 공공임대에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
 - 임대등록제 도입, 리모델링비용 지원 등으로 준공공임대 정착 및 재고량 확대
-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배수에서 기준금리+ α 로 변경(인하), 임대기간 연장 등 임대차인 권리관계 개선
- 보증증권 기반, 전세자금 <누구나전세보증제도> 도입

21

일·주·월단위 정액제 Pass카드 도입으로 교통비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 현행 1회용 티켓 등 외에 이용횟수와 거리에 무관하게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일·주·월, 48시간, 72시간, 가족단위, 커플용티켓, 외국인방문자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액제 Pass 발행
- 월 단위 티켓 이용객의 경우 지하철, 버스정류장 연계 공영주차장을 무료 내지 할인요금 이용혜택 부여
- 버스준공영제 기반 (시간, 노선)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하여 경제성, 사회적 편익 극대화 추구

22

30만 택시기사의 생존권보장, 안전교통을 정착하겠습니다

- 수소차, 전기차, LPG하이브리드 등 다변화 및 LPG택시 연비개선 지원
- 전액관리제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택시기사 월급제 단계적 정착
- 택시기사 승터 편의시설 확대
- 승합택시 도입 군 지역 확대 실시



23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여 대학생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OECD 평균은 GDP 대비 1.2%, 2015년)로 늘리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투자 확대
-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 지원 배제)
-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대학생, 청년 주거난 개선을 위해 기존의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를 공급
-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기숙사 수용률 명시
 - 현행 대학평가지표에 기숙사 수용률과 사립대학의 전입금 포함
 - 기숙사 건립 및 운영 관련 정보 공개

24

흙수저 대물림을 막고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금수저와 흙수저 학교로 구분되는 고교체계 전면 혁신
 - 임시명문고로 변질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 과학고·영재학교는 사교육 유발효과를 최소화하는 선발 및 운영방식 도입
 - 일반고에 학생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수강신청제 도입을 통해 일반고 혁신
- 대입에서 스펙경쟁 유발하는 수상실적, 각종 인증 등 반영 금지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 정원내 기회균형선발(고른기회전형)비율을 늘리는 대학에 대해 국가재정지원 사업 확대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외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 저소득과 지방 우수인재의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지원 확대

25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고교무상교육 실현
-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제로화
- 교복값 30% 인하 추진
 -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 의무화', 시·도교육청별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제도 도입
-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부담
- 농어촌 학교 스쿨버스 지원으로 안전한 통학 및 체험학습 강화



26

기초학력 보장으로 낙오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축
-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도입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영어·수학시간에 1학급 2인 교사 배치
 - 초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전제로 한글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글교육책임제 도입,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책임반 운영
 - 지역교육청의 학습클리닉 센터를 통해 학습전담교사 지원 및 협력교사 지원
-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기 위한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
-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대를 위한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

27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만족도와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 고교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
 - 고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제 도입
 - 학교별 이수 희망자가 적은 과목을 위해 거점학교, 수업교류, 순회교사, 온라인 교과 이수 등을 도입·확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원 확대 및 교육 내실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총정원을 확대하고 배정 방식을 개선하여 원하는 학생은 전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이 가능하도록 지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직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인근 학교들과 공동교육과정을 교류하는 진로 캠퍼스형 학교 운영

28

노후학교, 찌뚱·냉골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40년된 노후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 학교건물 안전평가제도 전담기관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진단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종합적 대책 마련
- 노후 책걸상 및 노후 화장실 재래식 변기 조속히 교체
- 학교 전기요금 산정체계 변경을 통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29

교육민주화를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임용 거부시 학내 구성원들에게 임용 거부 사유 제시 법제화
- 사립학교법상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비리재단 복귀 저지 및 비리 사학 퇴출



30

가계부채,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대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8년간 가계부채 대책이 수차례 발표됐지만, 가계부채는 매년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폭증
 - 2007년 665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2015년 1,207조원으로 1.8배가 됐고, 1인당 1,370만원이던 빚은 2,385만원으로 증가
 - 정부는 매번 가계부채에 대하여 관리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국민 개인의 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가 우려되는 수준임
-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금융채무 불이행자+채무조정관련자+장기연체 소외자)이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114만명은 금융당국도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2013.3.29.출법)은 '320만명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실제 실적은 그 10% 수준
-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3단계 대책
 - 제 1단계 :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담 경감
 -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
 - * '연체 채권 회수'에서 '연체 채권 소각'으로 정책 전환
 - *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 즉각 구제 효과 기대
 - 금융기관 보유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채권은 추가 매입 후 소각
 - 제 2단계 :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
 -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 제기 금지 및 매각 제한
 - 제 3단계 : 개인 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
 -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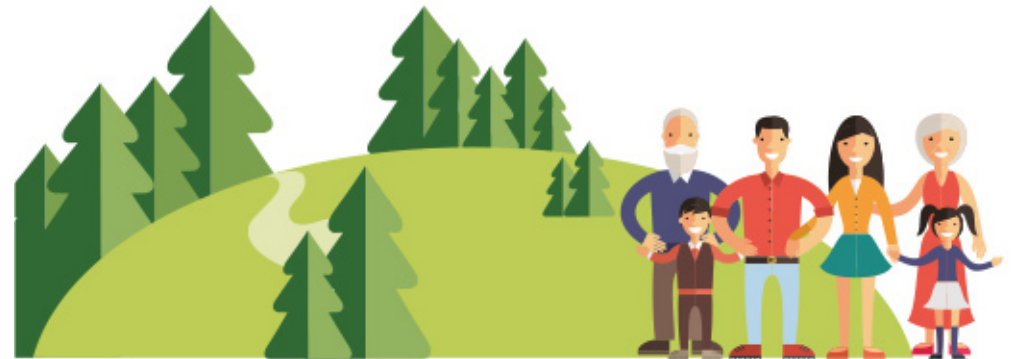
부당·과도한 금융기관 수수료를 막아 얇은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최고 27.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 경감

32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후 소득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금리인하 유도함으로써, 주택연금 지급금 확대
- 주택연금 지급보증기관 확대, 금융회사 독자적인 주택연금 취급을 통해 소비자의 주택연금 선택권 확대



33

무주택·서민의 금리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가중되는 서민 부담 경감
 - 전월세는 보증금이 사실상 담보로 작용, 부실 발생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보증료 및 출연료를 낮춰 금리인하 효과 유발
 -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료율을 0.1%로 고정 (현행 1억원 이하 0.18%, 1억원 ~ 4억원 0.28%)
- 정부 정책에 순응한 고정금리 대출자의 역차별 방지
 - 정부의 고정금리 상품 강화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이 금리변동에 따라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추가부담(중도상환수수료 등) 없이 인화된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34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 제조사와 통신사의 묶은 담합의 고리를 끊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요금 인하 효과 극대화
- 공용 WiFi 무상제공 및 공공 WiFi 확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Super WiFi 구축’으로 획기적 데이터 요금 경감
- 음성·문자·데이터 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 단말기 가격에 대한 국제 비교를 실시하여 국내 고액 단말기의 거품을 빼는 단말기 유통 가격 개선 추진
-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2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1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맘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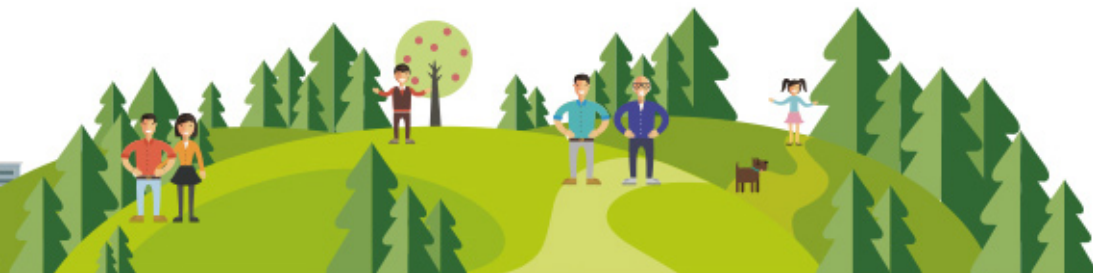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추진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대기업의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시 처벌 강화
 -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
-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
 -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대상의 확대
 - 퇴거보상제의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추진
-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 도모
 -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10,000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규제
 - 다만,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2 기업의 갑질을 근절시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등 갑질 근절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 협력 추진
-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근절 추진
-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등 갑질 근절 방안 마련
-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등 갑질 근절 추진
-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근절 방안 마련

3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 중소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극대화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료, 입점료 폭리 등 부당한 비용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 강화
-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강화, 과태료나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4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 우회출자, 계열사 지분과 자사주 교환, 기업집단 밖의 우호기업을 이용한 순환출자 등 실질투자없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 신주의 배정을 금지
 - 계열 공익법인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계열사 우회 지배 차단을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 강화
-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
 - 재벌총수 일가의 「꿈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
-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독립성 및 의결권 행사 강화로 시장에서의 견제기능 회복



5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습니다

-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 기업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기금' 도입
-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 및 보호 강화
 - 알기 쉽고 간편한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부담완화 및 투명성 강화
 - 금융기관의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

6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내수판로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의 이행력 제고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현황 : (2011년) 195개 → (2013년) 202개 → (2015년) 207개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시장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제품 홍보·공동브랜드·공동구매상담회 등 마케팅 역량 강화
 - 판로 확대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 브랜드 활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판로 개척을 통한 판로 활성화 도모
-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 인터넷·모바일·공영홈쇼핑·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판로 확충

7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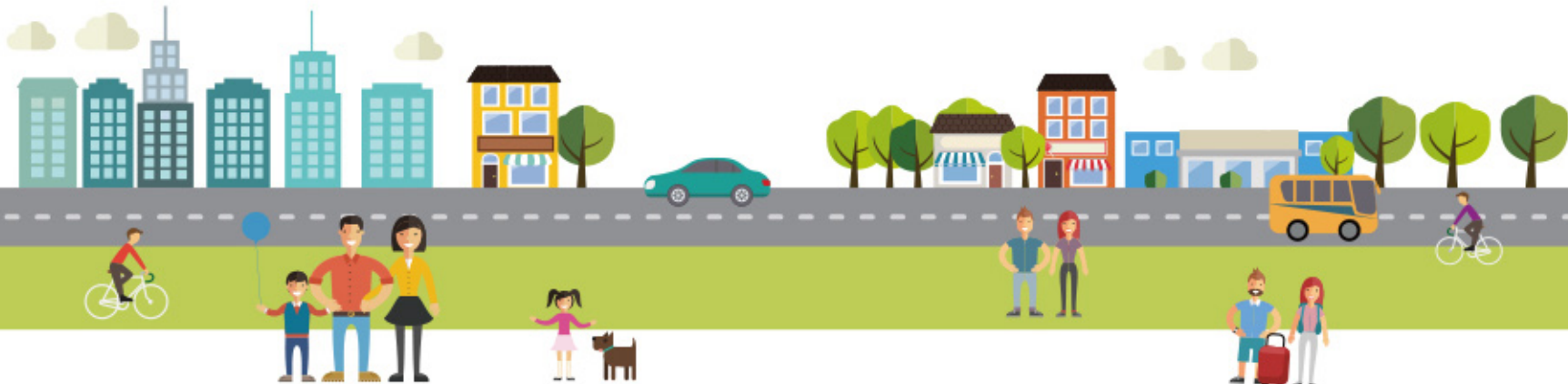
- 자영업자의 창업 역량 강화
 -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정보제공,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 유도
 -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과잉진입 사전 예방
-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지원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 슈퍼업종(나들가게) 뿐 아니라 기타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환경 개선 및 성장잠재력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9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센터 등)
- 시장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 공동마케팅, 홍보, 상인교육 및 시장조직 역량강화 등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품권 사용 편의성 지속 추진
- 대형마트·SSM과 경쟁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
 -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 ICT 기반의 전통시장 지원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
 - '03년~'15년 772.5억원 국비 투입, 37개 센터 건립지원(운영 32곳, 건립중 5곳)
-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함께 연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추진

10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를 통해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11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해서 현재 세율 22%를 2009년 이전 25%로 원상회복
- 재벌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적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도록 함(자기자본 500억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적용)
-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을 원칙적 공개하여 세금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함

12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부처별 행정간막이 해소와 정책추진체계 통합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전체고용 대비 사회적경제 고용비율 5%로 확대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0% 등 사회적책임조달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 협동조합 금융·공제사업 등 사회적금융 기반정비와 사회투자기금 5조원 조성
- 사회적경제특구 지정과 사회적경제 통한 지역재생으로 지역공동체 개발
- 청년주거빈곤과 서민주거문제 해결 위한 사회주택 정책 및 공유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통한 보육·돌봄,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시스템 혁신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개정을 20대 국회 입법화
- 국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로 국정 아젠다화
- 지역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지역 사회적경제 민·관협치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3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1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절반가량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 심각한 노인빈곤은 OECD 국가 최저수준의 노인복지에서 기인.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28% 수준에 불과
 - 2011년 OECD 국가들의 노인복지 지출이 GDP 대비 평균 8.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4%에 불과

우리나라 연도별 노인빈곤률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빈곤률	44.6	45.5	47.0	47.2	48.6	48.5	49.6

자료 : OECD

- 노인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음. 빈곤 문제가 사회·여가활동 참여 제약,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건강문제 노출, 가족관계 위축, 심리사회적 위축 등 초래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지원 확대. 박근혜정부에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대 연금액(월 20만원)이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
 - 그나마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어 최대 연금액 20만원을 전액 수령 받는 분이 10명 중 4명 미만
-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것임.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 15%)으로 인상
 -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어르신 70%에게 월 30만원씩 차등 없이 지급
- 우선, 2016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2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채권,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 과도한 금융투자로 인해 국민들이 조성한 막대한 공공기금이 국민들을 위해 활용되는데 한계
 - 향후 2,500조원까지 증가하게 될 국민연금기금을 실물경제에 투자하게 되면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 효과 등 기대
 - 특히,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양질의 인프라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
- 국민연금기금 매년 10조원, 10년간 총 100조원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확충에 투자 추진
- 공공투자된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국채투자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연기금 기존 수익률과 동등한 수익률 보장
 - 공공투자는 ①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 → ②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 ③ 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 시행 → ④ 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진행
 - 국민안심채권은 시장유통을 하지 않되 국채투자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률 보장 (미국 연기금 투자 방식)
- 국민안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정부, 지자체가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직접 수행
 - 정부가 파이낸싱 등 공공투자 사업 총괄. 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지자체 소속 공사(公社)가 수행함으로써,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지자체에 귀속
 -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장년용, 신혼부부용, 청년용, 학생용 등 맞춤형으로 시중가 대비 10~20% 쉼 가격에 공급
 - 사업 성과에 토대하여 공공투자 사업을 장기요양,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공공개발 사업 과정에서 새로운 '관찰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안 좋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3

**더 벌면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만들겠습니다**

-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에 따른 불형평성'으로 인해
 - 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보험료 폭탄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증가에 따른 생계형 체납의 증가 ③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④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2년 가까이 논의해 왔으나, 돌연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임
-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
 -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보험료 수입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활용
 -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문제를 해결
 -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보험료 배제, 재산기준의 상향조정 등 재산에 대한 공제의 폭을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 체계로 전환 추진
 -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 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여 '충분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
 - 정부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

4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교육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
 - 만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우선 추진(농어촌 등 기존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추진)

5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겠습니다**

- 0~5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에 기준하여 지원.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보육인력 처우 개선 추진
 - 중장기적으로 일반 보육료와 보육인력 인건비 계정을 분리하고,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책정 추진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을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함으로써 학부모 추가부담 방지
 -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어린이집 운영자 대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여 현실을 반영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및 공공성 지원 확대

6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개개인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 의무교육중단 학생에게 의무교육 경비에 준하여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기능 보장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확대
-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쉼터 확대, 기능 다양화로 청소년 보호 강화
 - 자살위험, 보호관찰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전문상담가) 프로그램 확대

7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 지자체·지역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공익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 방과후학교의 책임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장 제도 도입
- 방과후학교에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8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를 도입,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연금 가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 4천원)를 정부가 3개월 동안 납부 (성년축하 연금가입지원).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최저보험료 납부(취업장려 연금가입지원)
- 이를 통해 모든 청년(국민)에게 최소한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국가가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유도, 모든 청년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대비가 가능 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

9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
 -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삭감되어 실질적 혜택이 없는 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조사하는 소득·재산 항목에서 기초연금 수령액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삭감되는 문제 방지
-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연금액 수준 설정 및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10 국민연금 삭감 중지하여 최소한의 노후대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2015년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수령액이 32만 5천원으로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 7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현재도 매년 삭감되고 있음
- 지난 2008년 국민연금이 종전 대비 17% 삭감된데 이어, 지금도 매년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음. 오는 2028년까지 종전 대비 33%까지 삭감될 예정
-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삭감을 중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 45%로 유지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국민연금 하나로 국민 누구나 기본적 노후대비가 가능한 중장기 방안 추진

11 노인 일자리 100만개 늘리고 수당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탈출구를 마련하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를 당장 2배 수준(32만여개 → 65만개)으로 늘리고, 이후 일자리 수요 전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0만개까지 확충
- 아동 등 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참여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12 저소득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값을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 고혈압, 당뇨 등 노인의 대표적 만성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 동네 병·의원 및 동네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 관련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약값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여 평균적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방안 추진

13 불효자방지법을 마련하여 자식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학대행위를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소급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토록 함

14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 복지센터로 만들겠습니다

-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어르신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확대개편
- 내부공간을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여가활동 지도 전문가(여가 프로그램) 및 간호사(건강검진), 평생교육 전문가(노년기 교육), 상담 전문가(심리상담) 등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
-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취사,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공간으로도 활용
- 취사와 목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15

장애인 권리보장 법제화로 장애인 인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장애인 권리보장 입법화 추진
 - UN 권리협약에 입각한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 정의
 - 시설 수용 중심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정책 원칙 전환
 - 소득보장, 주거권, 의사소통권, 참정권, 건강권 등 법적 명시
 -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구축
- 장애인 권리 실효성 강화
 -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자율적 장애인복지정책 시행 근거 마련
 -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종합 계획 마련

16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 확대하여 기본권적 생존권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연금액 인상
 - 장애인 소득실태에 기초하여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추진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기본급여 인상 추진
-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장애인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주택개조 사업 확대
- 장애인 건강지원 확대
 -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검토
 -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

17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다수고용사업장, 표준사업장) 확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확대,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확대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시험고용제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다양화 추진

18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개인별 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 필요한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정착 지원
 - 10인 미만 정원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지속적 확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
 -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단계적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폭 확대(서비스 상한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및 서비스 이용자격 장애인 전제로 확대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

19

남녀 함께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성인지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분석, 성인지교육을 내실있게 추진
 - 여성거버넌스 강화, 부처간 성평등 정책 심의·조정 강화 등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여성대표성 제고
 - 고위직 공무원중 특정성별 공무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임용지침’ 마련
 - 의사결정분야의 낮은 여성 참여 현실 극복을 위해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확대 및 처벌 강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등
 -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의 일반교과목 지정

20

차별없는 여성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15년 7월 147개 → ‘19년 200개) 및 다양한 취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기능 확충
-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및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

21

일·가족·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
-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체계 강화
 -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



22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 체계 개선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을 위한 감호위탁 시설 설치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전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목표로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와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및 이행 관리·감독 강화, 교육참가자의 평가를 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효과성 평가 환류시스템 마련

2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 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가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및 기능 보강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마련
 -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
 - 청소년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사실혼, 1인가구 등 혼인·혈연·입양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지원 강화



24

6세 미만 아동의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현재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15종의 국가 무료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나, 독감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

25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
 - 간병에 필요한 인력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1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 간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의 수가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공공 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 적극 추진
- 2016년에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공공병원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병원은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관련기준을 충족한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하여 환자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부담을 대폭 완화

26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의료공공성 지켜내겠습니다

- 재벌에게 특혜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 원격의료는 현재와 같이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도서-산간 취약지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
 -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관련법 폐지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27

만성질환 보장 강화하고 동네 병원·약국 살려 내겠습니다

- 1차 의료기관들의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 및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
 -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 동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동네의원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 추진
- 모든 환자가 1차 동네 병의원을 거쳐서 2~3차 대형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1차 의료 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28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난임 가정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 의료적·경제적 이유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용 국가가 지원
- 난임시술에 동반되는 각종 검사와 투약 및 처치비용 등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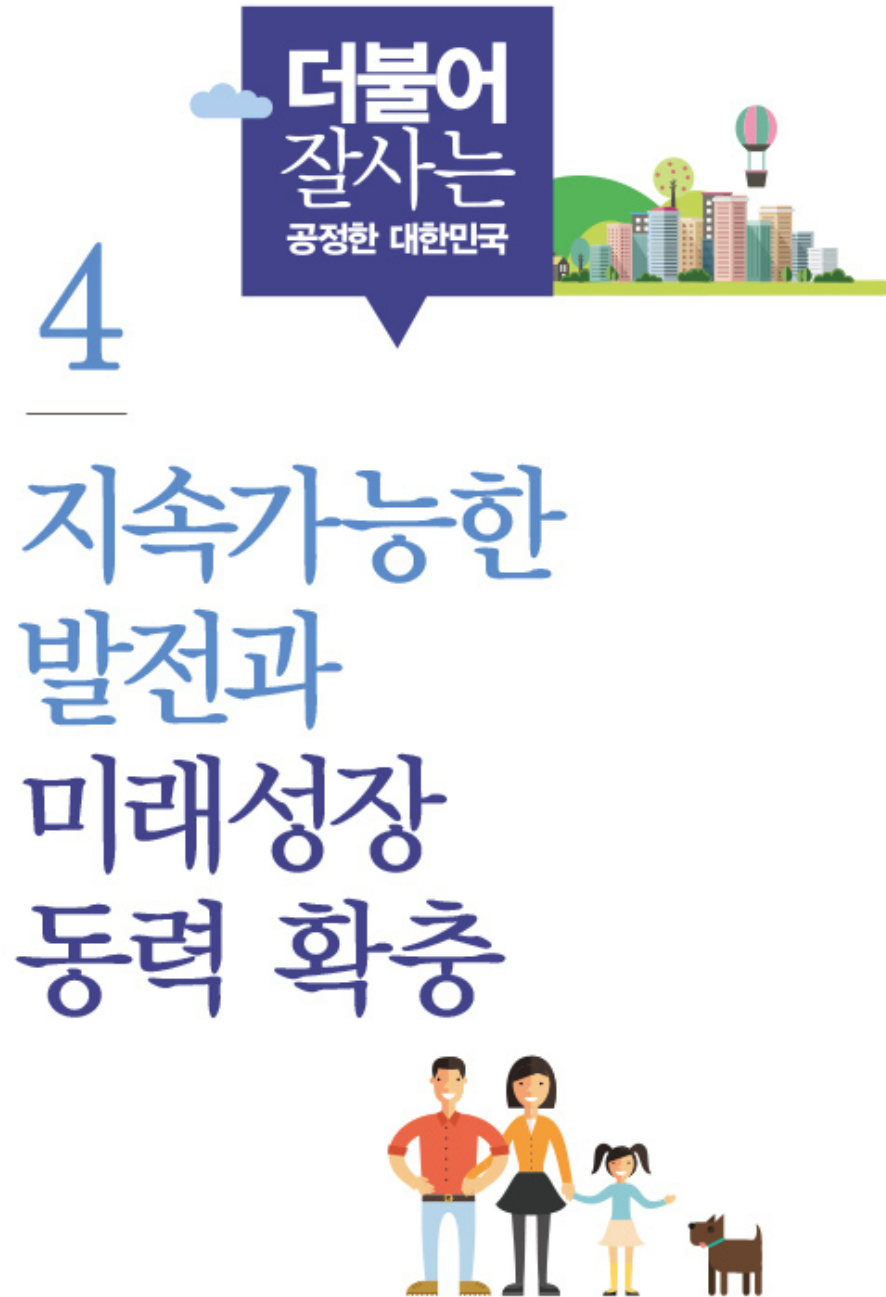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 실시
- 현재 소외계층(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초·중·고 학생까지 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체계 형성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확대

30

문화예술인·체육인 등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체육·영화·미디어 제작 근로자 등의 특수고용 의제 추진
 - 사회보험의 특례 확대
- 예술인활동증명제도의 경력관리 시스템으로의 개선
- 예술인강사,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및 근로형태에 따른 조합 결성 보장 추진
 - 사업예산의 일원화, 근로계약기간 확대 조정 및 보수의 현실화
- 민·관 참여의 독립적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및 세부단위의 예술인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창작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주관 공공기관 대상 예술인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시행
- 청년 문화예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을 위한 창작환경개선 및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지역 대학 관련 분야의 전시, 공연, 포럼의 국가지원
- 지역문화협동조합 설립지원
 - 공공부문 문화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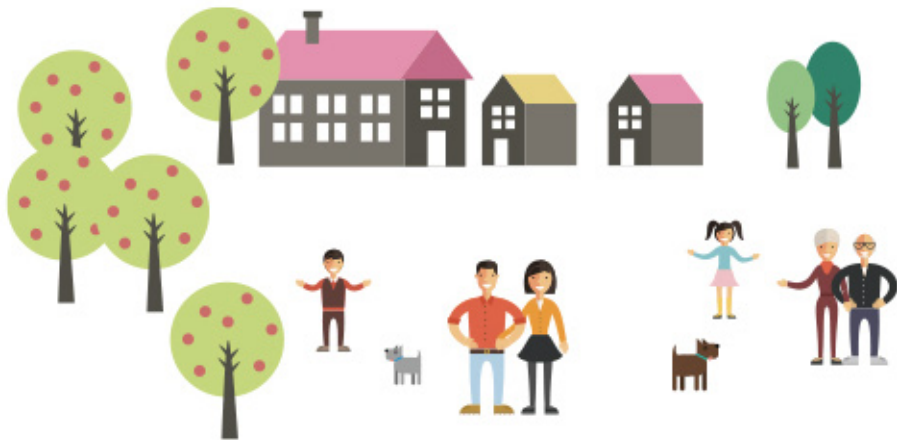
1

고부가가치 창출 7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저장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 노후 원전 해체산업, LED, 스마트그리드 (송배전기기 등) 등
-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주력 제조업 육성
 - 고부가가치 핵심 신소재·부품기술 개발(탄소섬유 등), 바이오·나노, 생명과학, 항공우주(부품, 유지보수 등), 지능형 로봇 및 지능형 반도체, 해양플랜트, 3D 프린팅과 IT·스마트폰 관련 디바이스, 융복합 신기술·경량화 소재 제품 등
-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미래형 스마트카·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
 - 전기차 관련 충전인프라, 부품, 배터리 등 관련 산업, 지능형 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 미래 ICT 전략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산업 육성
 - IT·BT 융합한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식량·원예·수산·식품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바이오식품 산업, 친환경 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가공·관광 등 인접산업과의 융·복합화 등
-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
 - 해양생물 메디컬푸드 산업, 농업과 의학의 융합을 통한 애그로 매디컬 (Agro-Medical) 산업, 웰니스(Wellness) 산업,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산업 등
-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 문화 콘텐츠산업 및 전통문화와 해양문화가 함께하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테마형 해양관광지 및 해양관광특구 조성, 외래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한 지역전문 관광 가이드제도 도입 및 광역별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등

2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우수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민간투자 중심의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활성화 등)
 - 역량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민간투자 중심의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활성화 등
-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및 개선 등을 통한 경영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와 창업 안전망 확충
- Start-Up(창업 초기기업)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엔젤투자(개인투자)를 활성화하여 강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엔젤투자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
- 벤처·창업기업의 안정적 인력 수급 및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 토대 마련
- 데스밸리(창업 3~7년차)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창업초기 기업이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 성장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등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



3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 수출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대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첨단기술 및 원천기술, 신제품개발 등에 대한 R&D 지원 강화와 투자확대
 - 설비투자·판로지원·인력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지원
 - 해외진출 역량제고를 위한 국내외 시장정보 제공 등 수출마케팅 지원
 -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품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내수중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지역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사업 지원 강화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현재 내수시장 진출 지원
 - 대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간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해외직판) 활성화 및 쇼핑몰 구축 지원



4

인터넷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
 -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철폐
 - 국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해소로 국내 사업자 경쟁 기반 강화
 - 인터넷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신생기업 지원 강화
- 개인창작자, 중소기업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점, 재래시장 상인 등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인터넷 활용 도우미 제도 도입
 -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과 진흥을 위한 지원
 - 개발자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지원
- 음성인식(Speech Analytics) 기술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이 되는 한글 정보화 초석 마련
 - 음성인식 기술 혁신을 통한 IT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가공을 통하여 안정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과 규제를 개선
 - 한국(북한 포함) 문화콘텐츠 디지털라이징으로 디지털 경제 기초체력 강화
- 모바일 앱 및 앱세서리(Appcessor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규 아이디어 유입 및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보육 센터 구축·지원 및 앱세서리 벤처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 모바일 검색, 모바일오피스, 모바일 게임,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모바일 앱 개발 지원
- 사물인터넷(IoT) 및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기술 등 집중자원으로 제4차 산업 혁명 주도

5

고속철산업을 세계 3위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한반도U자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세계 3위권 고속철 경쟁력 확보
 - 국가 10대 성장동력사업으로 고속철사업 육성
- R&D 및 설비투자로 시속 600km대, 세계 3위권의 고속철 경쟁력 확보
- 송도(인천)-강릉간, 목포-부산간, 부산-강릉간 고속(화)철도 건설로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차기 정부에서 단계별 착공

6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미디어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질서의 확립
-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성 확보
-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사회적 책임 강화

7

세계 최초 ICT MUSIRARY(박물관+도서관 결합형)를 건립하여 미래세대의 꿈터로 만들겠습니다

- ICT 박물관 건립
 - 대한민국 ICT 산업 발전의 진면목을 국내외에 보여 주고, ICT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 ICT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ICT 박물관 건립
- ICT 도서관 건립
 - ICT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정보를 얻고 공부할 수 있는 ICT 도서관 설립
- 박물관과 도서관이 한 곳에 자리한 MUSIRARY(Museum + Library) 건립
 - 역사를 보고 느끼고,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박물관과 도서관을 복합형으로 건립

8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 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하여 한국경제 신성장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 환황해·환동해 성장전략 추진
 - － 환황해 성장 전략: 개성공단, 인천 물류, 새만금 산업단지특구, 목포 조선·해양, 순천 철강, 광양 석유, 전북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전남 친환경 유기농 복합단지, 평택 해양 물류 등
 - － 환동해 성장 전략: 부산 통일물류·해양 거점, 속초 천연 에너지,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동해 남북 어업협력, 울산 자동차, 포항 철강, 남북한 동해 북부선 연결 등
- 남북협력개발 전략 추진
 - － 한반도 U 자형, X 자형 산업 벨트 구축 방안 추진
 - － DMZ 남북 상생 특구(인천·파주 산업경제 특구, 연천·포천 농업교류 특구, 철원 역사문화 특구, 고성·속초 관광산업 특구) 설치추진
 - － 북방경제 3대 SOC 사업(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조직 설립
 - －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설립추진
 - － 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립추진

9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의 정년 환원(61세 → 65세)
- 과학기술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별도 ‘연구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
- 과학기술분야 주요보직에 과학기술전문가 등용확대 및 우대 방안 도입
- 과학기술 분야의 유능한 젊은 연구자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세 미만 대학교수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중 인건비 120% 지원 의무화로 비정규직 축소, 일-가정양립 R&D대체인력 운용 활성화, 경력단절 방지 강화
 - －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체계 및 조직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중심으로 통합 정비

10

기초연구분야 지원확대로 노벨상 수준 연구성과 올리겠습니다

- 기초연구분야 연구개발비 확대(2020년까지 20%)
- 기초분야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도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제도정비
- 연구개발비 관리제도에 네거티브시스템 도입하고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간의 전용만 관리토록 하여 연구행정 부담 완화
- 기초연구 중심 출연연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위한 블록 펀딩 확대 및 집행 자율권 보장
- 과학기술 올림피아드 수상자 기초연구과제 지원

11

과학기술 독립 행정체계 강화하고 전담부처 부활시키겠습니다.

- 현재 국가R&D 심의평가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권 보장
-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조직을 선도하는 과학기술부 독립하여 설치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

12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 도시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혜택 제공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공중보건·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강화
- 농어촌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

13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자발적 상생기금조성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농어촌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을 추진
- 기금 조성 기한과 조성 금액 점진적으로 확대



14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끊임없이 늘려가겠습니다

- 여성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화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개별 여성농업인도 지원(50% 보험료 지원 등)
- '도우미 쿠폰제' 도입 (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급식센터 설치 확대
- '이주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15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시·군에 각 1개소 시범사업 후, 읍면지역에 1개소씩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여 영세농업인을 지원
-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제도' 도입
-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농가당 가축진료비 최소 20만원 조성(농가 50% 부담)과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16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촌복지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 「의무교육법」 준수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으로 '1면1초교' 유지를 제도화
- 농어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
 - '100원 택시' 등 농촌형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버스 무료이용 실현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 농어촌유학 법제화를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 노동재해보험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

17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 산업 지키겠습니다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최저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
 -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생산자단체 포함 위원 구성
 - 매년 최저생산비 고시
-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 곡물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

18

발농업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발농업직불금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수산물직불금을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도서지역 확대 및 천일염 생산 어가도 조건불리 수산물직불제 대상에 포함
-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 경작을 통해 자연과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럽 등 농업 선진국들과 같이 '생태보전직불금' (WTO 허용보조)을 지급

19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과의 형평성 맞추겠습니다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하여 농업과 같이 10억 이하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교세 적용
- 육상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일정규모이하의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20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
- 농협 신경분리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 품목별전국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제도와 생산자조직의 지역자조금제도 도입
- 지역 생산자조직의 조직화를 위해 지역자조금제도 도입
-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 관련제도 신설로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

21

발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투자하겠습니다

- 발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투자하여 FTA로 인한 발농업 피해를 최소화



22

반려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추진
-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 유기동물보호소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
 - '종견장'(퍼피밀)에 대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를 위한 '허가제' 실시
 - 불법 종견장에 대한 단속 강화

23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20%로 높이고 '발전차액지원 제도' 병행 실시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35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RPS(공급의무화제도)를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병행 추진
 -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

24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 주민 건강과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난개발을 막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개발지역의 수용자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시 건강영향 및 사회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켜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측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함
- 국립공원을 개발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이 상생하는 대안적인 생태관광 중심으로 추진



25

4대강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의 수문개방과 보철거 시범사업 및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대형보의 단계적 수문개방과 보 해체 추진
 -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녹조 상습발생 구간, 먹는 물 수질 악화구간, 수생태계 파괴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대상 보를 선정하여 수문 개방 및 보 철거 시범사업 실시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재자연화사업' 추진
 - 금강유역권역에 '생태복원기술 클러스터' 조성
- 4대강사업 국정조사 추진

26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서 가슴기살균제 등 환경피해를 받은 분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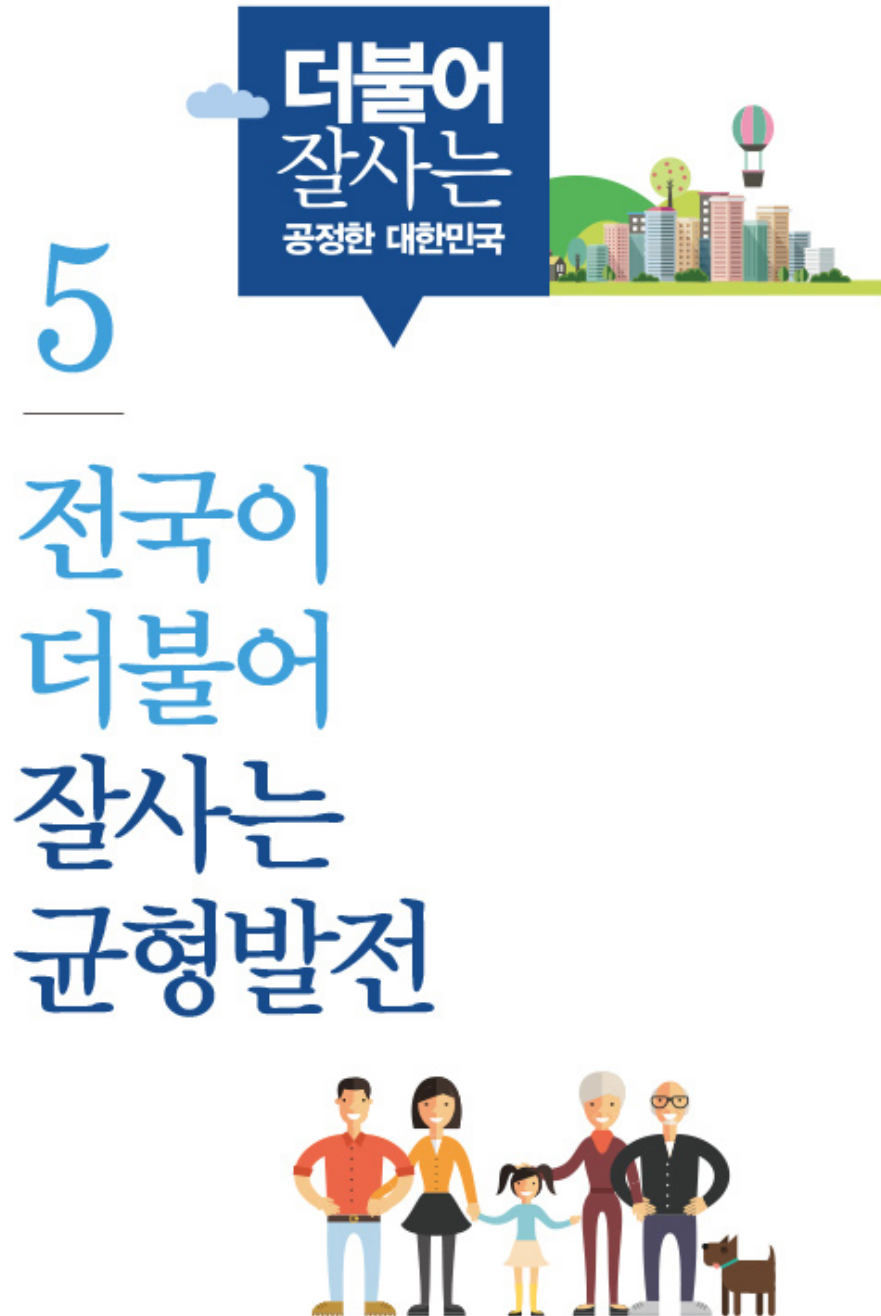
- '석면피해구제기금'을 '환경피해구제기금'으로 확대하여 환경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가슴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 가능

27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방식을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폐가구 무상회수 및 재활용으로 국민들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로 이전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지방비 및 국고 절감
- '폐가구 무상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 단순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게 하는 'Up-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1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대 정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추진
-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집중지원
 -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 혜택과 함께 공공부문 연구개발비 확대 지원
- 기존 관련기구보다 위상이 강화된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 설립

3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투자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U턴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 등 대규모 지방투자 유도
 -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시설과 인력확보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효과 제고
 - 지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투자 가속화
 -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FDI) 지방 유치를 통한 지역기반 산업 고도화
- 지역별 주력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자립화
-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경쟁력 강화

4

지방의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자주자원 확충으로 세수기반 강화
 - 국세-지방세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
 -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의 20% 이상으로 확대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
 - 지방세 신세원 발굴, 정액세율의 현실화 등 지방세제 개편
- 이전자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교부세 제도 개선
 - 지방이양, 통폐합 등 국고보조사업 정비
 -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사회복지비용 국고부담 강화
 -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제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지출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축제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5

중앙 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 확대
 - 우선, 기존 미이양 사무 지방이양일괄 법제화 추진
 - 2단계로 국가 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 추진
 - 3단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일괄 법제화 추진
- 개별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사무발굴 및 이양 추진
-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이양
- 주민 중심의 친화적 책임치안의 구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등 추진



6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회에 법안심사권을 가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
- '중앙-지방 협의회' 설치·운영으로 중앙-지방간 포괄적 협의채널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상생협력 강화 및 동반자적 관계 구축
- 지방자치권의 확대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 확대에 내 고장 맞춤형,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실현
 - 지방자치제도의 주역인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방 발전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대도시 명칭부여
 - 읍·면·동 단위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중앙과 지방에 경계조정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
- 주민참여예산제 제도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확대

7

지역방송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 시민참여 방송 지원확대
 -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심의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
- 지역 미디어 허브로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 지역미디어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역 공동체 미디어·문화활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 유관부처,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미디어정책협의체 설치 추진
- 지역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 공동체라디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을 마련하여 활성화 방안 수립,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진입·소유·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허가 방안 마련
- 지역방송 지원 강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방송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지배구조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개선
 - 지역방송 지원예산의 현실화 및 예산의 콘텐츠 개발·유통 지원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및 산하 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등의 위원 및 이사 선임시 지역인사 포함



8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신문광고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신문시장을 정상화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되, 무료신문은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효성있는 신문 진흥책 마련
 -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하여 포괄적 '신문진흥기금' 확대 조성 추진
 - 지역신문에 대한 디지털 사업 및 재교육 지원 강화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

9

소외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복합형 문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 면, 리 등 문화 소외지역의 유희 공간 리모델링 사업 확대
(폐교, 폐시설 활용/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추진)
- 복합형 문화공간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운영 지원
- 소규모 복합형 문화공간을 기초단위 문화예술센터로 유도
- 유희 문화공간 활용과 운영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수립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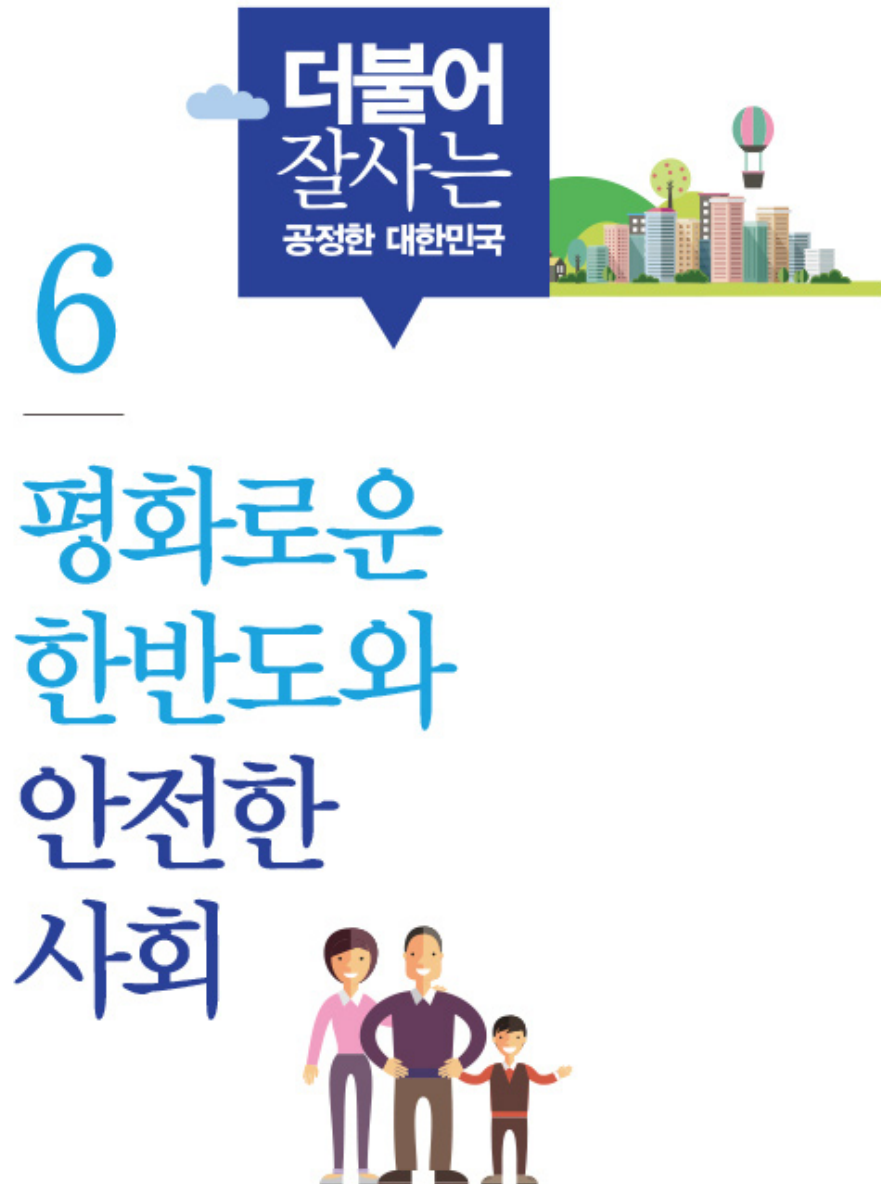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실현하겠습니다

- 문화인프라 부족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
- 역사문화조성을 위한 콘텐츠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
- 단위지역별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도서·사서 확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보서비스 확대
-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 확대
- 자유학기제 확대 및 유청소년의 건강한 활동 증진을 위한 권역별 스포츠체험센터 확대 설치

11

지방 노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 안전한 수도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
 - (상수도관망)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확대 추진
 - (정수장)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 상수도 보급지역 내에 거주하지만 급수분기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47,000가구)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1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등 한미간의 상호 호혜적인 굳건한 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
 -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 강화,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독자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제를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력 확보
-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를 구축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2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변 4강과의 평화 협력 외교 실현
 -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 동북아 국가간 갈등과 대립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 6자회담을 동아시아안보협력체로 발전
 - 한·중·일 3국과 북한, 몽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강화
 - 북한, 몽골 등 역내 저개발 국가 개발지원을 위한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 북방대륙경제 진출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3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 대북정책의 통합 조정과 정책 기능 강화
 - 통일부의 역할 강화 및 중복 기능 개선
 - 통일·외교·안보 관련 청와대 조직(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개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 기능 강화
- 민주통일재단(가칭) 설립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남대화 촉진과 민간 통일운동 지원
- 남북합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통한 남북협력 증진

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2(남·북)+2(북·미)회담 개최와 6자회담 조속 재개 추진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다양한 분야별 남북 회담 제도화 추진
- 남북국회회담을 통한 통일대비 법·제도의 정비·보완 작업 등을 실시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

5

남북주민 모두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총선·대선 승리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 재개 추진
 - 남북협력 사업 안정화를 위한 남남합의, 남북합의, 국제합의 강화 방안 마련
 - 남북경제협력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 합의서 채택
 - 북한 농촌, 산림 등에 대한 개발협력 추진
 - 전면중단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피해 보상
- 백두산·평양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 평양에 남북경제협력사무소 설치 추진
-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

6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사업 본격 추진과 남북 지자체 자매결연 사업 추진
- 개성 만월대 복구, 거례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남북 민간교류의 본격적 추진
- 남북 방송·정보통신 교류·협력 사업 적극 추진
- 광역 지자체별로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 건립·설치
-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대북확성기 방송 규제

7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 냉전시절 동독의 정치범 등을 서독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송환받은 사업) 추진
- 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 실질적 인권 개선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격하고 독자적인 통제방안 마련
- 우리의 사법주권을 제약하는 한·미 SOFA 규정을 개정하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사법주권 확보
-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와 관련하여 불분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규정 개정

9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 추진
-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간부 대비 병의 비중이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를 미래전에 적합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
- 사병의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 병력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등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 연 평균 증가율 수준 제고
- 방위력 개선 등 자주 국방력 확보를 통한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억제력 확보
 - 북한 억제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첨단기술 개발 능력 확보 및 국방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충



10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으로 군비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안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국내 방위 산업의 대대적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으로 군비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안보 선순환 구조 창출
- 기업 지원사업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방위사업 관련 분야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방산비리의 경우 '이적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방산 비리 업체는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연수 대폭 연장
- 방산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 부당이익 외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
-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는 등의 군 사법 체계 개편으로 방산비리에 대한 군사법원의 온정적인 판결 개선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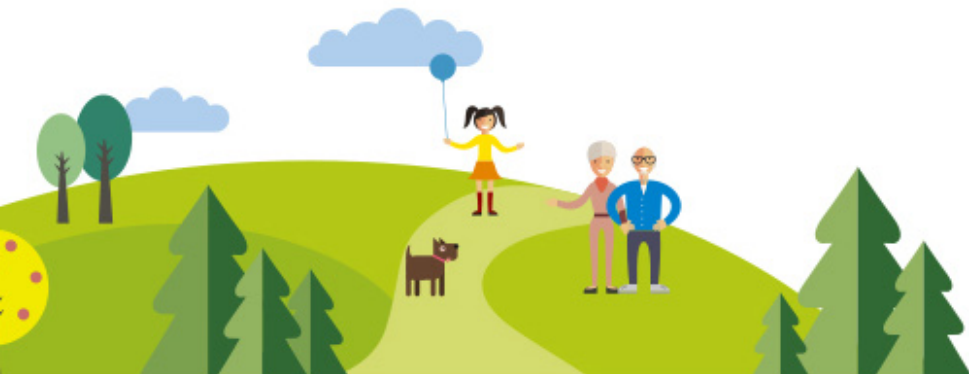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병 월급을 평균 10만원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 제대시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제도 도입
 - 사병 급식비 단계적 인상, 사병 생활관 등 조기 개선 추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확대, 군 응급 전문인력 확대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군내 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보호 등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 격오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셔틀의무버스 운행
- 복무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학점을 현행 9학점에서 15학점으로 상향 추진



12 '직업군인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높ی겠습니다

- 군인의 정년 연장과 계급별 정년 단계적 폐지 추진
- 여군들에 대한 복지 및 인권 확충
 - 기혼 여군들의 복무 및 출산·육아 양립을 위한 '여군 모성복지시스템' 강화
 - 군대내 여군 관련 성범죄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히 적용
-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처우개선
 - 전세자금 지원 단가를 실 소요에 맞도록 단계별 현실화 추진
 - '격오지 수당' 인상으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군인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급 등 지원 강화
 - 군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강화 및 대도시 기숙 시설 확대
 - 군 주둔지역에 체육센터 등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복지시설 마련
-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이 '사이버 대학' 과정을 통한 학사 학위 취득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13 군사시설 보호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작전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화
-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의 경우는 원점에서 합리적 재조정
- 군 작전을 이유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현 시가를 고려한 감정가로 협의 매수 또는 사용료를 지불
- 군용항공기지 등과 관련한 규제는 최소화
 -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의 합리적 조정
 - 소음 피해대책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군용항공기지의 이전을 포함한 포괄적 방안 모색

14 국민을 위한 희생 국가가 보답하겠습니다

- 독립, 민주화, 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 확대
-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보존 강화
- 제대군인 취업 지원 확대



15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위험시설과 위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통신지원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
 - 안전교재 개발, 안전교육강사 양성, 안전체험시설 확보, 안전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민안전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재난 의무가입 대상 확대
-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보급 및 훈련 강화
- 지자체별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별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 민방위 훈련은 지역내 대피소 찾기 훈련 등 권역별로 특화 실시

16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무단장기결석일을 3일로 축소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영유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시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청에 통보
 - 통보받은 경찰서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해당 영유아 및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 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호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재 5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치료를 위한 쉼터 대폭 확대
- 아동 학대 예방 교육프로그램 강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 아동 학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확충 및 법규 단속 강화 등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 확대
 -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나 수상안전교육 확대 및 활성화 지원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가의 낡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지원



17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책임지겠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을 위한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
-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환경 급식 공급 확대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노인회관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 확대
-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 도입
- 농민장터, 꾸러미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소비자 직거래를 강화
- GMO 완전 표시제 도입

1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초)미세먼지 측정망확대 및 전문인력 보강 추진과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산업시설이 집중된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실시
- 미세먼지 과다발생이 우려되는 교통량이 집중된 곳에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 학교버스, 학원버스를 CNG로 교체해서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실현
- 대중교통(지하철)이용 승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 교통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19

소방과 해경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
 - 재난 방지를 위해 평생직업으로 종사하는 소방직종의 경험과 소방산업육성 등 중앙정부의 소방정책 입안 관리기능 강화
- 소방장비를 현대화 하고 해경구조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노후장비의 현대화 추진과 현장인력 보강 및 인력의 정예화 추진
- 특수구조대의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통해 육상이나 해상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
- 소방 예산 확충과 소방인력 처우 개선
 -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금 비중 확대
 - 119 기능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안전 관리강화
 - 현장 3교대 근무 보장, 근속승진 확대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 해경의 정상화를 통한 기능 및 역할 강화
 - 해경의 현장 단속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 재정비 및 정상화
 - 대량 살상무기와 각종 위험물을 해상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경의 경비함정 세력 확충



20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경찰인력 확충, 수사 장비의 현대화, 전문수사인력의 양성으로 민생치안 강화
- 지방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상시 소탕체제 구축
 - － 범죄 신고자의 보호대책을 강화하여 보복범죄 방지
 - － 지역별 각종 범죄지도 제공 확대
 - －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무기한 단속 실시
-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민생경찰 3교대 근무 보장, 근속승진 확대 등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21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서 사고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개선
-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화학물질 관련분야 업무를 지자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원 확충

22

원전 재앙 없는 나라에서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 인사권,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하여 철저한 안전감시책임과 의무부여
 - － 인적 구성에 있어 여·야간 균형을 맞추고 상근직 위원 확대 추진
-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운영·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강화

23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제2의 메르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겠습니다

- 부족한 공공의료(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검사하고 치료하도록 조치하여 공공병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 감염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병원 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적자금의 집중적 배분
 - －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의 국립대학병원에 격리병동건물 신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사, 간호사, 보건학 전문가 등으로 전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류 및 국내외 교육훈련 제공

24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제도 전면 개선 추진
-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재편하여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
-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강력 처벌 및 피해 보상 의무화
 - 불법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게 과징금 기준 최고액을 상향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
- 일정 범위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 책임 강화
- 인증·보안기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선택 및 보안 전문가 육성 지원

25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재외동포청 설치
-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호보법」 제정
- 재외공관의 국민안전보호 활동 강화
 - 재외공관의 대응체제 및 영사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

7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1

국가정보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 개정·보완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기능 강화로 불법·탈법 행위 방지
 - 국정원 예산 특례 폐지로 정보위 예산 심의 기능 강화
 -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 포함,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
 - 수사상 진술이나 압수수색의 예외 등 국가정보원 직원 수사 관련 특례 폐지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물건의 직무상 비밀 신고요건과 압수거부요건 강화
 - 국회 상임위에 정보기관 감독 업무를 지원할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
-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과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개혁
 - 검찰총장임명에 있어 권력개입 차단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위원회 구성, 검찰총장 국회출석의 의무화, 감사의 국가기관 편법파견 원칙적 금지
 -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 감사징계위원회와 검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 감사원 개혁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의 폐지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감사위원후보의 검증강화
 - 감사위원회 의결의 투명성 강화



3

종군 위안부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일간 위안부 문제 재협상 추진
- 국민성금 모금을 통한 위안부지원 재단 설립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관련 사료 조사·발굴사업 지원 확대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조사, 자료공개 등 진상규명 노력 지속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4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역사 왜곡이 심한 2016년도 5학년 사회과 새 교과서 폐기 추진
- 교육과정 개정, 국·검·인정 도서에 관한 결정 및 교과서 수정시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활동 보장
- 헌법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과목과 관련 없는 과목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 검토

5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주의 완화와 국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으로 각 정당의 국회의석에 지역편중 완화
 -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예비후보자제도 상시 운영,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 등을 통한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통합선거인 명부에 의한 전자투표 제도화,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확대 등 국민의 참정권 확대
-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현
 -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 뇌물수수죄 등의 경우, 일정 금액(약 5백만원) 이상 수수한 자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
-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 국민통합을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 복원
 - 공정인사와 균형개발로 지역간 화합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6

반부패 개혁과 공직윤리 강화로 투명사회와 청렴국가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 구현
 - 금품수수 공무원의 징계강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7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법원의 다양성 확보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대법관 여성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경험이 다양한 학계, 시민단체, 재야법조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되도록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부여
 - 법관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
 -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 추진
-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
 - 군지휘관의 군사법권 및 수사권에 대한 개입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관의 확인 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 내부의 인권향상을 위해 군 장병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추진
 -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순종 군사범죄를 민간에 이첩하는 한편, 헌병, 기무부대 등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군 검찰의 지휘감독권 도입
 -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
-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또는 항소심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 추진

8

공권력의 무분별한 불법사찰과 개인정보수집을 근절하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불법사찰죄 신설)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민간인 비공개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
 - 감사원의 감찰사항과 무관한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수집행위를 처벌

9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여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지상파 및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및 1인 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여 자본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PP 규제 정상화
- 해직 등 징계 언론인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 정치적 심의 배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및 심의규정 대폭 수정



10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여 인터넷상 자유로운 활동 보장
-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시까지 게시를 허용
- 다양한 인터넷 도구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규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제도화
- 정치적 행정심의 불허 및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

11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겠습니다

- 현행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시위의 장소를 신고하던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 야간 집회 시위를 시간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되, 학교나 학원, 주택가 등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일정장소에는 제한적 금지
- 10인 이하의 소수가 확장장치(휴대용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도 축소함
-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경우에도 집회 시위 참가자간의 분리가 가능하고 참가자간의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
- 집회 시위에 대응한 경찰의 살수차 운영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12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사건 등의 완전한 진실규명 추진
-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검토
- 위령사업과 연구 조사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 친일, 강제동원 등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사업의 복원
 -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법」 개정 및 관련 복지재단 설립
 -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추진
-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고 있나요?
 취업준비와 학비 마련 때문에 오늘 역시 고단했겠지요.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치여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꿈꾸는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 그저 아득하기만
 합니다. 청춘의 다른 이름이 흙수저나 금수저가 아닌
 낭만과 열정이었던 시절이 있긴 있었나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희생과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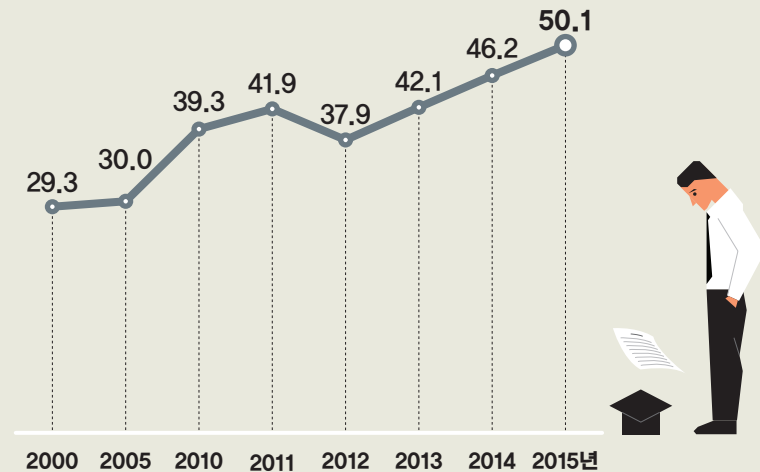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청년과 더불어
 꿈을 이루는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대졸 실업자 추이

(단위: 만명)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대졸 실업자 증가

대졸 실업자, 나날이 늘어납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맞는 일자리가 없어 백수로
 사회에 내 팽겨쳐집니다.

“그래서 바로잡겠습니다.
 청년과 더불어
 젊고 활기찬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

-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
-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하여 매년 8만 4천 개, 25만2천명의 일자리 창출
- 법정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안전망' 도입하여,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업부조금(취업활동지원) 지급(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국민소득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

- 2020년(제20대 국회 내)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달성
- 지자체 생활임금제 적용 및 민간영역 확산

대학생 부담 경감

-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 (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 지원 배제)
-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기존의 원룸 외에 1주택 2~4룸식 청년용 쉼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장기적으로 10만호를 공급해 대학생, 청년 주거난 개선
-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진학과 취업 등에 있어서 '금수저·흙수저' 등 수저계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

- 기득권과 특권 해소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균등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 금수저와 흙수저 학교로 구분되는 고교체계 전면 혁신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신입사원 채용 시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취업 균형 선발 의무화 추진

국민연금 생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연금 가입기반 확충

-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 4천원)를 정부가 3개월 동안 납부 (생년축하 연금가입지원).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최저보험료 납부(취업장려 연금가입 지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등 국방개혁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틀 마련

-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하여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
- 사병월급 평균 10만원 인상, 제대시 퇴직금 제도 도입, 사병 급식비 단계적 인상 등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

오늘 저녁밥상은 어땠나요?

혹시 오늘도 밖에서 허겁지겁 끼니만 때운 건 아닌지요. 저녁시간까지 포기할 만큼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적고, 그나마도 벗어날 길이 막막한 비정규직이다보니 바쁘고 불안정한 일상에 내몰린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언제부턴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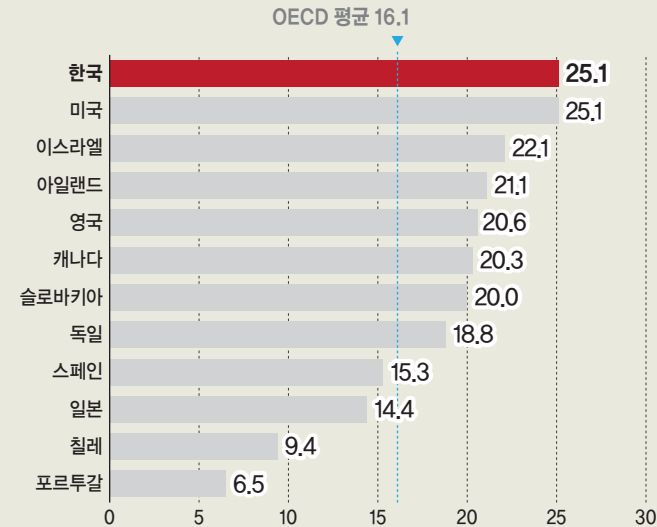
집에서 끓인 소담스러운 김치찌개를 가족과 함께 한 술 뜨는 저녁시간,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현실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직장인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꿔보겠습니다!



OECD 국가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자료: 2013 OECD 고용 전망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환경은 가장 열악하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직장인과 더불어
근로자 중심의 직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 도입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 필수 요건화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등 도입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

-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용 의무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 차별시정 제도 개선 : 차별시정 신청 주체 및 비교대상 확대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등으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및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강제
-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도급)에 교섭 등 책임 부여 의무화

‘비정규직 부담금제’ 도입으로 사용 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으로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감축

-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신설
- 일정 규모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를 신설하여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근로장려금

(EITC)등 지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최대 월 100만원 지원하고, 사내하청·용역업체 소속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시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근로자 범위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사업주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범위를 확대
- 산재다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책임 강화
-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주간 52시간 법제화

- 현행 법정근로시간 1주의 노동시간 한도 ‘휴일을 포함’한 52시간으로 법제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최장 근로시간의 한도 설정
- 2020년까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근로시간’ 적용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
-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근로자에 적용 확대

일자리를 잃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고, 실업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

- 장기 실업자와 폐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구직촉진급여 지급
-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 알바 등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적용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180일~360일로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현행 50% → 60%)으로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

오늘 장사 어떠셨나요?

꿈을 갖고 시작한 가게는 무너진 골목상권 따라
휘청휘청 흔들리고, 밤잠도 줄었건만 인건비만
겨우 남으니 장사 할 기운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옆집 치킨집은 문을 닫았고 윗집 피자집도
어렵다는데... 퇴직 후 마련한 유일한 생계인
내 가게가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자영업의 위기가 곧 우리 경제의 위기가 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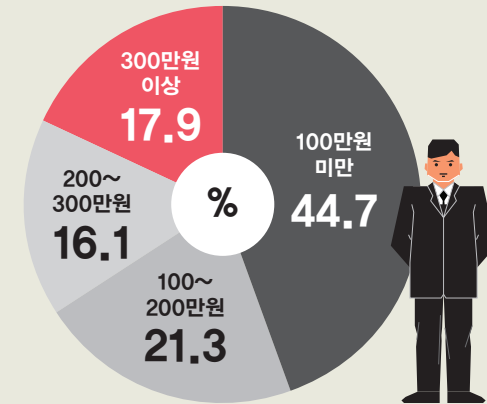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자영업자와 더불어
동네가 살아나는 경제로
바꿔보겠습니다!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 현황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골목상권 몰락, 자영업자 빈곤

퇴직하고 퇴직금 몽땅 털어 골목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대기업들까지 골목 사업에 뛰어들었다. 밤잠 설치며 운영하고 있지만 앞날이 더 캄캄합니다.

“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자영업과 더불어
동네가 살아나는 경제로
바꿔보겠습니다!
”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 자영업자의 창업 역량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환경 개선 및 성장잠재력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쉼터 등)
- 시장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 대형마트·SSM과 경쟁을 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함께 연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추진

기업의 갑질행위 근절로 을의 권익 보장

-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등 갑질 근절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생 협력 추진
-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근절 추진
-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등 갑질 근절 방안 마련
-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등 갑질 근절 추진
-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근절 방안 마련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이익보호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추진
-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
-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 도모

부당·과도한 금융기관 수수료 억제로 가맹점의 부담 경감

-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최고 27.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과도한 이자부담 경감

오늘 하루 편안히 보내셨나요?
따뜻한 인사조차 쉬이 드리기 어려울 만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데, 누구보다 편안해야 할 삶의
시기에 빈곤을 걱정해야 하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며 한 평생
자식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는 누구보다
국가가 나서서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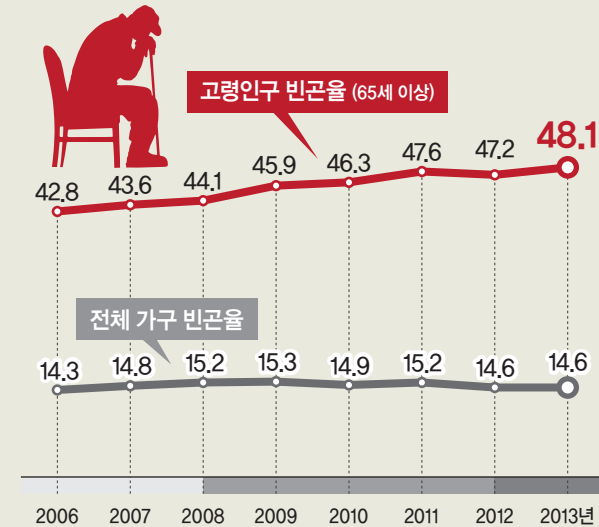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과 더불어
노후가 편안한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노인가구 빈곤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노인이 가난한 대한민국

OECD 국가중에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르신들은 국가가 돌봐야하는게 맞습니다.

“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어르신들과 더불어
노후가 편안한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이 지급

-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삭감없이 균일하게 지급
- 국민연금가입기간과 무관하게 30만원 전액 지급
-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여도 삭감없이 30만원 각각 지급

최빈곤층 어르신 40만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연금액 수준 설정 및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국민연금 삭감 중지하여 최소한의 노후대비 기반 마련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원칙 정립
-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삭감을 중지하고 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 45%로 유지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 국민연금 하나로 국민 누구나 기본적 노후대비가 가능한 중장기 방안 추진

노인 일자리 100만개 늘리고 수당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탈출구 마련

- 노인 일자리를 당장 2배 수준(32만여개 → 65만개)으로 늘리고, 이후 일자리 수요 전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0만개 확충
-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 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참여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값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

- 고혈압, 당뇨 등 노인의 대표적 만성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동네 병·의원 및 동네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 관련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경감
- 소득수준에 따라 약값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여 평균적으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경감시키는 방안 추진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 복지센터로 건설

-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어르신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로 확대개편
-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취사,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공간으로도 활용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제공을 실현하고 준 공무원 수준의 ‘괜찮은 일자리’ 제공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및 요양시설, 장애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확충
- 국공립 시설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민간 시설 종사자를 준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
- 국공립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20만개 확충

주택연금제 개선으로 은퇴 후 소득 확보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주택연금 지급금 확대
- 주택연금 지급보증기관 확대, 금융회사 독자적인 주택연금 취급을 통해 소비자의 주택연금 선택권 확대

오늘은 얼마나 웃으셨나요?

한 때는 지나가던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던
소녀였는데 요즘은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적게 받고 일터에서
별어지는 성차별도 감당해야 하지요. 결혼은 또
어떻고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결혼과 출산이
경력단절과 보육대란으로 이어지니 얼굴 가득 걱정이
들어서는 건 당연합니다. 지속가능한 일과,
차별 없는 일터 그리고 육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성 홀로 짊어져야 할 무게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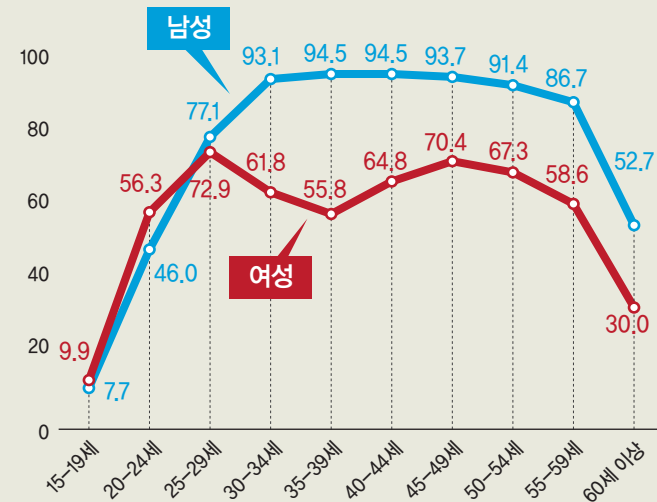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여성과 더불어
여성이 편한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2015년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여성 임금차별, 여성 경력단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불리하죠. 아이낳고 키우고, 집안 일에 직장일까지...
그러면서도 언제나 불안한 것이 대한민국 여성의 삶입니다

“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여성과 더불어
맘 편한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남녀 함께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건설

-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여성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조성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 창업여성에게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현 월 통상임금의 40% 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
-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개월 유급휴가를 낼 수 있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
-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여성폭력 처벌 강화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확충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개별 여성농업인도 지원(50% 보험료 지원 등)
- '도우미 쿠폰제' 도입 (출산·교육·휴가·질병에도 확대, 연간 일정 일수 선택하여 사용)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방통대, 일반대학 편·입학 학자금 일부 지원 추진
-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공동급식센터 설치 확대
- '이주 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100% 국가책임 보육·교육 반드시 실천

- 만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오늘도 세상은 '갑'의 편만 들던가요?

양심을 걸고 만든 제품과 피땀으로 개발한 기술들이
'을'이라는 이름에 가려 홀대받고 있진 않나요?

중소상공업을 보호하지 않는 경제구조 속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분야를 점점 잠식하고 있고

'갑'의 횡포에 '을'의 피해는 속수무책으로

늘어만 갑니다. 대기업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갑과 을이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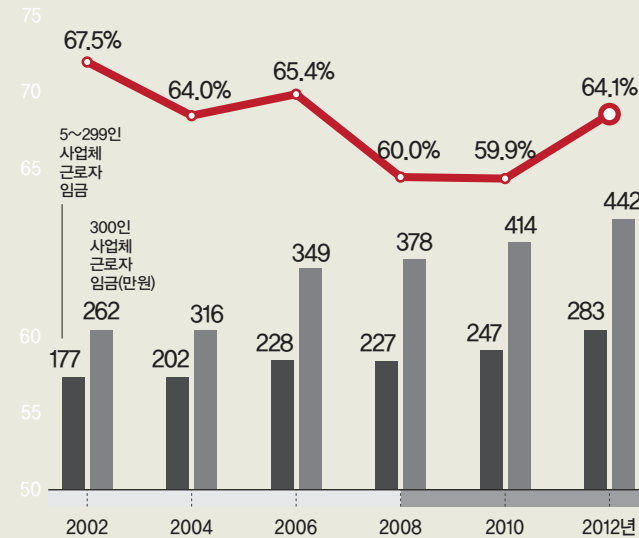
함께 만들 수 없을까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경제가 반듯한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수준 자료: 고용노동부



'갑'질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이란 계약서의 명칭이 계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은 많고 임금은 적은 불공정한 세상에서 '을'은 언제나 서럽기만 합니다.

“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중소상공인과 더불어
경제가 반듯한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업자 등 누구나 맘 편히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추진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대기업의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시 처벌 강화
-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서 중소기업의 이익 침해 방지책 마련

-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극대화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대료, 입점료 폭리 등 부당한 비용전가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활동 강화
-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내수판로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중소기업제품의 내수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의 이행력 제고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 확대
-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시장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제품 홍보·공동브랜드·공동구매상담회 등 마케팅 역량 강화
-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마련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를 통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제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마련

-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해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제도’ 도입
- 국가 및 지자체 발주·용역·위탁사업자의 입찰 및 선정과정에 있어서 ‘일자리 평가지표’ 적용 및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기업 우대

불평등 해소 목표제인 ‘777’플랜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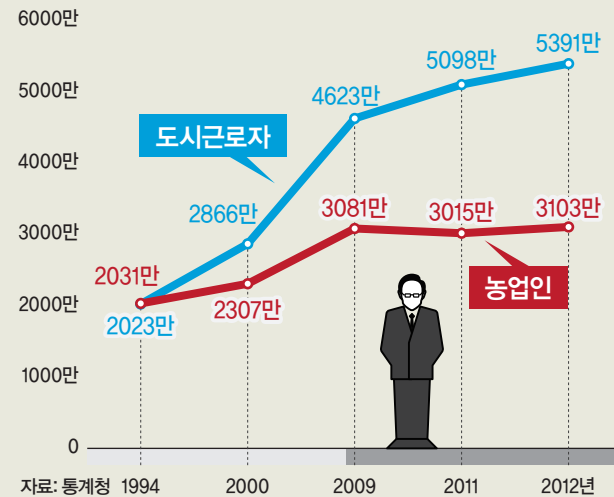
-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 설치하여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비중을 2020년까지 70%대 달성
- 한국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체제’에서 중산층·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배분시스템 개선
- 소득계층 간 소득 배분구조 개선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아마 오늘도 보셨겠지요? 산과 들판, 바다 위에
떠있는 새벽별을요.
새벽별과 함께 시작한 하루의 끝에 내쉬던 숨이
혹시 한숨은 아니었는지요. 하루 종일 흘린 땀이
무색하게도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격차는
자꾸만 벌어지고, 부족한 수입과 교육여건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니
헛헛한 마음에 나오는 한숨을 막을 길이 없을 테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어민이
아무걱정 없이 땀 흘릴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이는 그런 곳이
우리의 농어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농어민과 더불어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와 농가 연평균 소득 (단위: 원)



도농격차 심화, 지역 불균형 확대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전원일기'는 이제 동화 속의 이야기로 남겠지요. 나이 든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곳에 도시로 떠난 아이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농어민과 더불어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는
세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혜택 제공

- 도시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혜택 제공
- 여성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 공중보건·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강화
- 농어촌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

발농업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 확대

- 발농업직불금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을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도서 지역 확대 및 천일염 생산 어가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에 포함
-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 최저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촌복지 향상

- 「의무교육법」 준수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으로 '1면 1초교' 유지를 제도화
- 농어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
- 농어촌 어르신 공동주거·급식시설 확대
- 농어촌유학 법제화를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 노동재해보험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

발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투자하겠습니다

- 발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투자하여 FTA로 인한 발농업 피해를 최소화

더불어 민주당이 확보한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을 더욱 확대

- 자발적 상생기금조성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 을 조성하여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농어촌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을 추진
- 기금 조성 기한과 조성 금액 점진적으로 확장

농업에 비해 불리한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확보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하여 농업과 같이 10억 이하에 대해 단계적으로 비과세 적용
- 육산양식어업 등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직접 어업을 경영하는 직계비속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자영어업인이 일정규모 이하에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작업 대행센터 설치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 시·군에 각 1개소 시범사업 후, 읍면지역에 1개소씩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
-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제도' 도입
-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농가당 가축진료비 최소 20만원 조성(농가 50% 부담)과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 개선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지원

-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
- 농협 신경분리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 품목별전국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제도와 생산자조직의 지역자조금제도 도입
- 지역 생산자조직의 조직화를 위해 지역자조금제도 도입
-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 관련제도 신설로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제20대총선 공약 자원소요 규모 및 조달 방안

1. 자원조달의 기본방향

- ‘재정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 는 기초하에 국민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20대 총선 공약 마련
-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 등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
 -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육시설 확충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
- 세입면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
 -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 (2007년 19.6%)까지 2%p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 확보

2. 공약이행 소요자원 규모

- 소요자원 추계의 전제
 -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총선공약으로 추가로 자원 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함.
 - 기존의 예산틀 내에서 총지출의 자연증가분이나 자원투입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은 소요자원 추계에서 제외
- 소요자원 규모 : 2017~2021년간 총 147.9조원(연평균 29.6조원)

〈 공약이행 실현을 위한 소요자원 규모 〉

(단위 : 조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합계	연평균
소요자원	17.9	26.8	30.3	35.1	37.8	147.9	29.6

3. 자원조달 방안

[1]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한 자원조달 방안 및 규모

1)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방안

-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고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 등을 삭감하여 진정한 ‘국민 세금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과도한 재정팽창 억제
- SOC 등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 연례적 집행부진, 유사중복사업 등 문제사업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여비·홍보비 등 경상경비 절약
-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공공SOC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자본 투자 유도
- 「국민연금기금」은 일부를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활용하여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중복 또는 낭비되는 지출요인을 억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복지자원 확보

2) 재정개혁을 통한 자원 조달 규모

- 연도별 ‘재정개혁’을 통한 추가 자원조달 규모 : 연평균 17.4조원

(단위 : 조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연평균)
재정지출절감(A)	4.8	7.7	7.9	8.1	8.3	36.8
국민연금 활용(B)	10.0	10.0	10.0	10.0	10.0	50.0
합계(A+B)	14.8	17.7	17.9	18.1	18.3	86.8 (17.4)

[2] 조세개혁을 통한 자원조달 방안 및 규모

1) '조세개혁'의 방안

-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조세감면액 GDP 비중 2.3% → 1.8% 0.5%p 축소)
 - GDP의 2.3%에 달하는 조세지출규모를 '2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0.1%p씩 인하하여 2021년 1.8%까지 축소
- 음성탈루, 해외탈루 등 지하경제 축소
 - 불법적인 탈루소득과 은닉에 대한 엄정한 과세 적용을 통해 현재 GDP의 17%대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조세정의를 도모
-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편향된 조세정책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 대기업 법인세 과세 정상화
 - 현 행 : 과세표준 2억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 개선안 : 과세표준 2억 ~ 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
- 초고소득자 조세부담 현실화

2) '조세개혁'을 통한 추가자원 조달 규모

- '조세개혁'을 통해 5년간('17~'21년) 총 68.6조원, 연평균 13.7조원의 추가자원 조달

〈 조세개혁을 통한 연도별 추가자원 조달 규모 〉

(단위 : 조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연평균
비과세감면정비	1.6	3.5	5.6	7.8	10.1	28.6	5.7
음성탈루 소득과세강화	3.0	3.0	3.0	3.0	3.0	15.0	3.0
법인세 정상화	2.1	4.2	4.5	4.7	5.0	20.5	4.1
고소득자 과세강화	0.9	0.9	0.9	0.9	0.9	4.5	0.9
합계	7.6	11.6	14.0	16.4	19.0	68.6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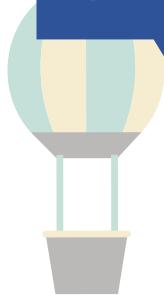
4. (종합)자원조달 규모 및 소요자원 총괄표

(단위 : 조원)

재 원 조 달		소 요 재 원	
조달 방안	규모 (연평균)	분 야	규모 (연평균)
1. 재정개혁(A)	17.4	1. 좋은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70만개 3.9조, 구직 급여 7.8조, 노인일자리 0.6조 등)	12.6
– 물적투자 축소	3.0	2. 저출산 극복 (육아휴직급여 1.6조, 공공어린이집 0.25 조, 고교무상교육 1.5조 등)	3.3
– 유사중복사업 절감 등	2.4	3.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연금 30만원 5.8조, 장애인 활동 보장 0.3조 등)	7.0
– 국유재산 효율적관리 등	1.0	4.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쉐어하우스 포함 공공임대 매년 15만호 공급 3.0조, 주거급여 확대 2.1조 등)	5.1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등	1.0	5. 농어민지원 (발농업직불금 0.57조, 발전비사업 0.2조 등)	0.6
– 국민연금 활용 등	10.0	6. 기타 (U자형 철도망구축 0.3조원, 지방상수도 0.6조원 등)	1.1
2. 조세개혁(B)	13.7	총 소요자원	29.7
– 비과세·감면 정비	5.7		
– 탈루소득 과세강화	3.0		
– 법인세	4.1		
– 소득세	0.9		
추가자원조달(A+B)	31.1		

※ 추가자원조달 규모 31.1조원이 모두 국가 예산 증가로 나타나지 않음. 그 이유는 재정 지출절감 7.4조원은 그 만큼 지출 감소로 나타나고, 국민연금기금 10조원은 예산외 활동임. 따라서 예산 증가분은 조세개혁을 통한 세입증가분인 13.7조원 내외 만큼 증가하게 됨. 이는 박근혜정부가 수립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15~'19년 평균총지출 전망치인 398.1조원의 3.4% 수준으로 재정팽창이나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시행가능 한 적절한 규모임.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값 5,000원

본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알리박스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416호(목동, 현대41타워)